홍창선 "40%든 50%든 쳐낼 것"…국민의당, 반발 여론 의식 '머뭇'

<더민주 공관위원장>

야권 '광주 혈투' 전략공천 변수

■ 더민주
서구을·남구·광산갑 대상
지역 영입인사들 투입 거론

■ 국민의당
선거구별 예비후보 3~4명
유권자 평가 반영 등 검토

4·13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민심을 잡기위한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 당의 전략공천이 향후 민심 향배를 판가름하는 큰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민주는 최근 전략공천위원회를 재가동하면서 이번 총선에 투입할 전략공천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더민주는 광주지역 현역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에 따른 국민의당 합류와 일부 지역구의 '인재난'으로 새 인물 투입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출신 영입 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오기형 변호사,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용빈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주목 받고 있다.

광산갑으로 지역구를 이미 정한 이 이사장을 제외한 3명은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수도권 투입 가능성도 열려있다. 하지만, 오기형 변호사는 광주지역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구을, 남구, 광산갑 등이 전략공천 대상 선거구로 거론된다.

서구을과 남구에는 등록된 예비후보가 없으며, 광산갑에는 임한필·허문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지만,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세상이 바뀌었으니 새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확 바꿔서 우리나라가 4만불, 5만불 국가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전략공천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천심사결과 현역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40%든, 50%든 다 쳐낼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더민주보다 현역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양적으로 풍부하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각 선거구별로 출마예정자들이 3~4명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략공천은 현역 의원 등 기존 출마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전략공천에 따른 반발로 인해 일부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 더민주와의 선거구도에서 국민의당이 불리해질 수 있어 쉽게 전략공천 카드를 빼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광주 시민의 반발여론 의식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광주에서는 2014년 광산을 보궐선거,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전략공천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과 관련 "유권자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역의원 '컷오프'를 시행하고 나서 해당 지역구에 '공천 경우의 수'를 늘리려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나왔다.

현역 의원들이 최근 공정한 경선참여를 주장하며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시행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것이 개성공단 의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 등이 15일 오후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을 방문해 의류 등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안 찍겠다" 광주·전남 67% 전국서 가장 높아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률이 5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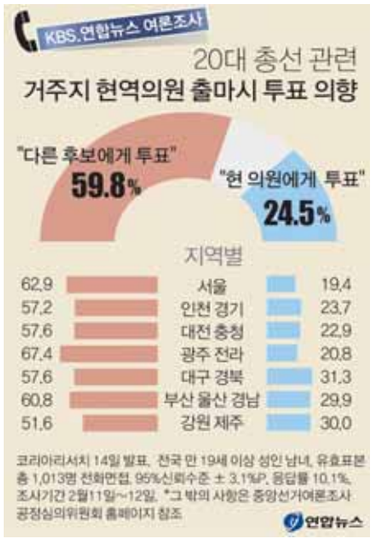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임의 전화번호 걸기(RDD) 방식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 답한 응답률은 24.5%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현역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65.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63.2%로 나타나 30~40대 연령층의 현역 물갈이 의지가 높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51.9%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67.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62.9%, 부산·울산·경남이 60.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31.3%)과 강원·제주(30.0%) 순서였다.

또 호남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당이 29.9%로 더민주(28.6%)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9.7%, 정의당은 6.3%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3석 못채워 국고보조금 12억 날려

교섭단체 구성 실패…국회 제3당 위상·역할도 위축

국민의당이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 1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날린 것은 물론 원내 제3당으로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도 위축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민의당에 6억179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면 18억200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3명이 모자라 12억 원을 덜 받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액의(99억9000만 원) 47%인 46억9300여만 원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1.5%인 41억45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총선 전인 내달 28일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72억8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17석을 유지하는데 그친다면 보조금은 24억8000만원으로 48억 원이 줄어든다. 특히,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원내 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의 위력을 보일 수 있고 총선에서의 세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15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영입을 추진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를 탈당한 신기남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과 이준서 에코준컴퍼니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전국위원회 농어민위원장에는 황주홍 의원이, 법률위원장에는 임내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광주 총선 채비…"8곳 모두 후보 출마"

새누리당이 광주 8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연욱 (주)마이스터연구소 대표이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호남 정치 1번지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미약한 힘이나마 지역선거 구도를 타파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광주 동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후보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지역구에서도 입지자의 출마설이 속속 나온다. 정승 전 식약처장은 서구을, 심판구 광주시당 위원장은 서구갑, 이인호 전남대 객원교수는 북구을, 한경노 전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남구 출마가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당은 후보 접수를 마치는 대로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다. 지역구에 복수 후보가 나오면 경선을 하고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서는 추가로 접수하거나 인재를 영입해 본선에서 지역구마다 후보를 낼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는 2명, 18대 총선에서는 8명의 후보를 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